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대중의 힘을 모아  
평화협정 체결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합시다.

평통사가 만들어가는 평화올레는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평화협정 카페 참조) 국민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과 주저를 떨치고 용기를 내세요. 평화와 복지, 자주통일,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이 바로서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 추진위원이 하는 일은?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공부모임 참가하기

평화올레 참가하기

7월 24일 평화협정체결  
한마당 행사에 힘 모으기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  
UN에 편지쓰기

추진위원 서명 참가 / 주변에 서명 참가 권하기  
서명 명단은 남·북·미·중 정부에 전달하고, 신문에 광고

추진위원은 1만원 신문광고비 모금  
- 국민 823701-04-164665 홍근수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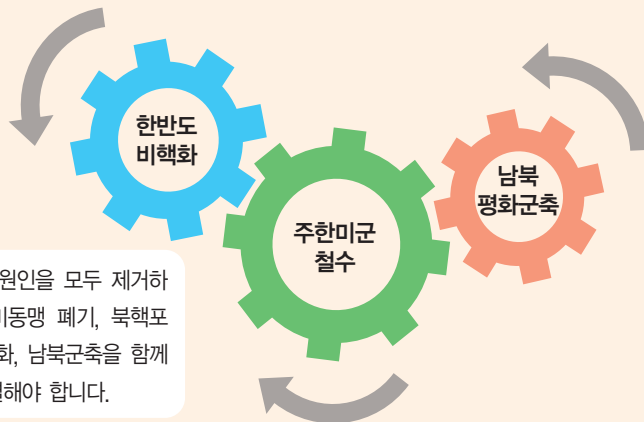
평화와통일은여러사람들  
www.peaceone.org

주 소 \_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3가 3-47번지 2층  
전 화 \_ (02)711-7292 팩 스 \_ (02)712-8445  
카 페 \_ http://cafe.daum.net/peaceagreement  
전자우편 \_ spark946@hanmail.net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전쟁위기,  
평화협정 체결해야!

평화협정 체결은 자주통일의  
대전제이자 필수적인 관문

- ◆ 천안함 사건 대응을 명목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0여차례의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되었습니다.
- ◆ 방구가 잦으면 뚫 나온다고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은 급기야 연평도 포격전 까지 불러왔습니다.
- ◆ 연평도 주민들의 일상이 깨지고 김포 애기봉 주민들이 누리던 평화의 단맛도 빼앗겼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살포로 파주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해졌습니다.
- ◆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은 북미, 남북간의 적대상태가 순식간에 전쟁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 ◆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8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 ◆ 평화협정은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법적 조치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입니다.



### 평화협정은 자주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관문

- ◆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1996년~1999년 4자회담,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등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이 종식된다면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성도 상당부분 제거하거나 한미동맹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지고 자주 통일의 탄탄대로를 열수 있습니다.

### 평화협정 체결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 실현의 열쇠

- ◆ 동북아는 미중일러 세계 4강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G-2체제의 두 기둥인 미국과 중국이 군사전략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 한국 전쟁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북미, 남북대결을 해소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 실현의 열쇠입니다.
-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제는 우리 땅 자체의 평화정착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강만길,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추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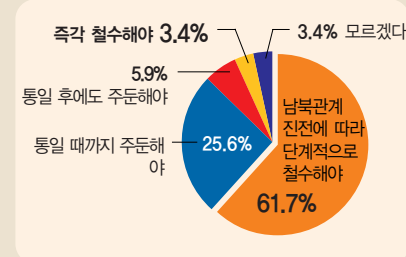
다시 열린 대화 국면,  
겨레의 힘으로 평화협정 체결하자!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기도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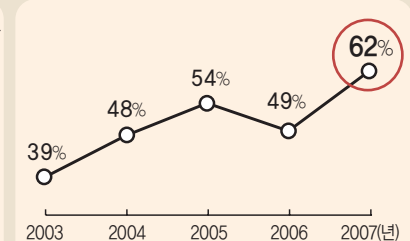
- ◆ 대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 ◆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붕괴시키거나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전략적 인내)으로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확인한 로버트 칼린(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담당관)은 오바마 정권이 파탄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오바마 정권의 선택지는 북미, 6자회담을 다시 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 ◆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도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 ◆ 새해 들어 북은 대대적인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 ◆ 대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우리 국민 75%가 연평도 포격사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여론조사 2011.1.5)
- ◆ 평화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힘을 모으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호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도 한미일 삼각 동맹의 비어있는 한축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힘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고 정세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입니다.
- ◆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북아 신냉전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 ◆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막는 일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과 함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 투쟁입니다.
- ◆ 국민 60%이상이 한미동맹 폐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 민중의 힘을 모으면 한미일 삼각동맹 형성을 막아내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 한국판 여론조사 2008. 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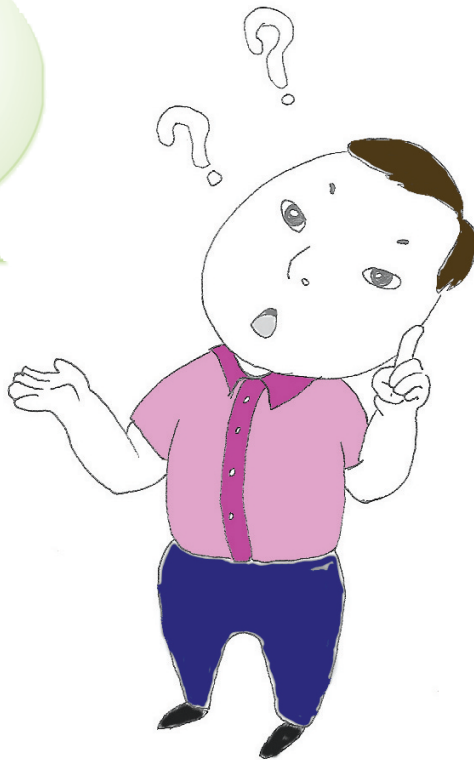
(중앙일보 여론조사)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민주주의, 정의와 인권이 확대됩니다.

-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후퇴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와 인권이 바로 섭니다.
- 분단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여 정의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분단과 대결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챙겨온 수구 보수 세력들의 기반이 무너져 민주주의가 확대됩니다.
- 남북대결을 빌미로 유지되어온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노동자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쫓돌만 들어도 빨갱이  
4대강 반대해도 빨갱이  
정권에 밋보이면  
빨갱이?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북미, 남북간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전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는 군사전략에 따라 공격적 작전계획(5026, 5027, 5029)와 대규모 전쟁연습이 사라집니다.
- 병력(2011년 현재 63만 8천명)을 1/2이하로 줄이고 국방비(2011년 국방예산 31.4조원)도 절반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과 독일의 인구나 병력수〉 2008년 기준

|     | 남북한      | 독일      |
|-----|----------|---------|
| 인구수 | 7,189만명  | 8,237만명 |
| 병력수 | 184만 5천명 | 28만명    |

서해교전 때처럼  
같은 민족의 젊은이들끼리  
총을 겨누지 않아서 좋아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평화의 물결이 넘치겠죠.  
야호~♪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와 경제번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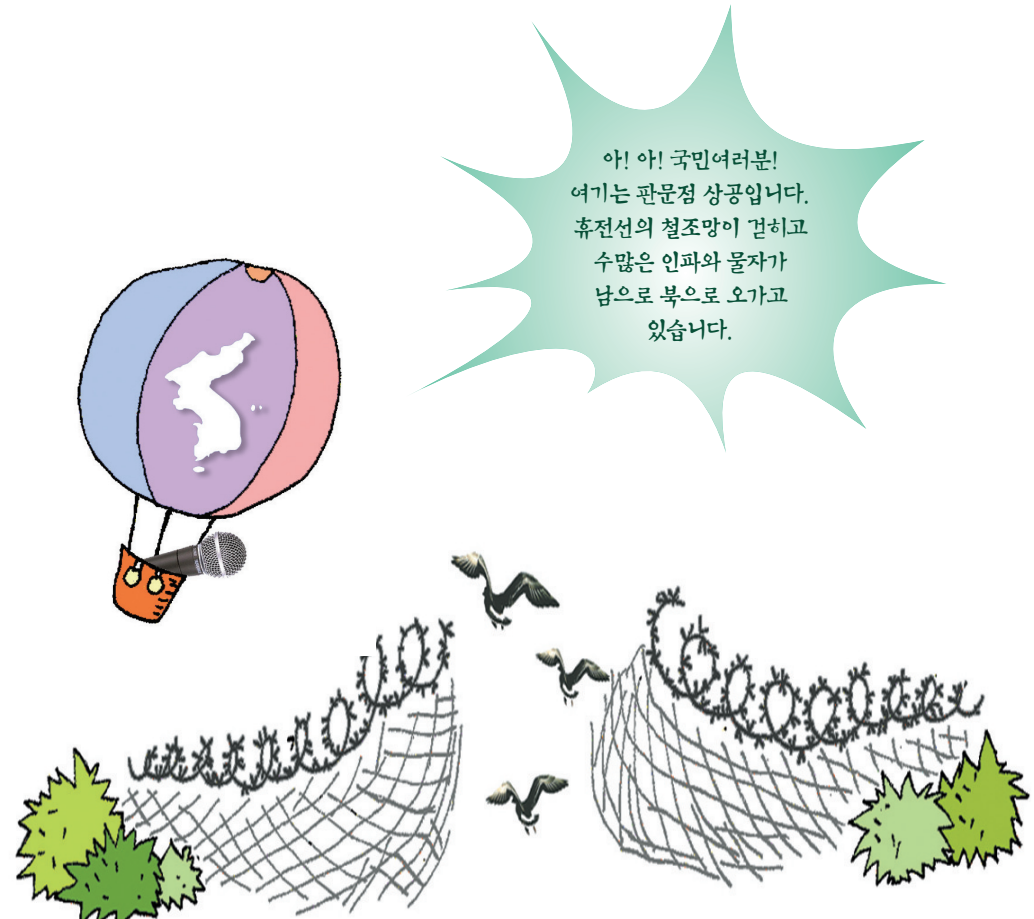
-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연구소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2005년~2009년 9월까지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5조2,668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1조5,275억원이나 됩니다. 2만7,000명의 취업자도 유발했다고 합니다.
- 10·4선언 이행으로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7조~38.9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8조~16.4조원이나 됩니다.(통일연구원,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2007년)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통일과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이 폐기되면,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이행이 전면화 됩니다.
- 이에 따라 남북은 연합·연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해 통일로 나아갑니다.
- 남쪽의 남는 쌀과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교환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이 전면화되고 민족경제공동체가 복원되어 공동번영의 길이 열립니다.
- 남북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전면화되어 통신과 왕래가 자유로워집니다.

“통일 코리아가 2050년에 실질 GDP 규모가 6조 5천억 달러에 달해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8위가 될 것”(골드만 삭스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 2009. 9)



## ● 평화협정 체결은 복지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 복지가 행복과 안녕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전쟁(위협)과 복지국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평화와 복지를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 군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5.7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 이 예산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소요비용 19조원의 83%, 민주당이 주장하는 16.4조원의 96%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필요재원        |             |
|--------|-------------|-------------|
|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 무상급식   | 1조(2조~2.5조) | 1조(2조~2.5조) |
| 무상보육   | 3조          | 4.1조        |
| 무상의료   | 12조         | 8.1조        |
| 대학생등록금 | 3조          | 3.2조        |
| 계      | 19조+@       | 16.4조       |

아빠가  
정규직이 되었으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태권도  
배울래요.

- 정규직 전환으로 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과 불안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졸업하자마자 대출금 상환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신세로 전락하는 기막힌 세상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면 걱정이 사라지겠죠.
- 비료값, 사료값은 오르고 쌀값은 폭락하여 농민들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가 부채이지만 면제되어도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도 빈곤층에게는 부담, 이거라도 내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이제 그만!!  
대학 등록금 걱정없이  
가고싶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도시로 간 우리 아들  
공장 잘 다녀 걱정없고,  
공부하는 우리 딸 대학 등록금 걱정없고,  
우리 할멈 병원비 걱정없으니  
살 맛 난다!!  
얼췌~ ㄹ ㄹ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관계가 평등해집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SOFA 등 불평등 조약과 협정이 폐기됩니다.
- 미군이 나가고 미군기지가 없어지며 한미동맹이 폐기됩니다.
- 평택과 파주 오현리에서처럼 미군기지와 훈련장 건설로 인해 쫓겨나는 주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습니다.
- 평택 등 미군의 침략전쟁 기지 건설을 위한 15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과 범죄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됩니다.
-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이라크, 아프간 등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안 해도 됩니다.
- 굴욕적인 한미FTA도 개폐되는 등 경제적 종속에서도 벗어납니다.

작전통제권 없는 나라가  
이라크랑 우리나라  
뿐이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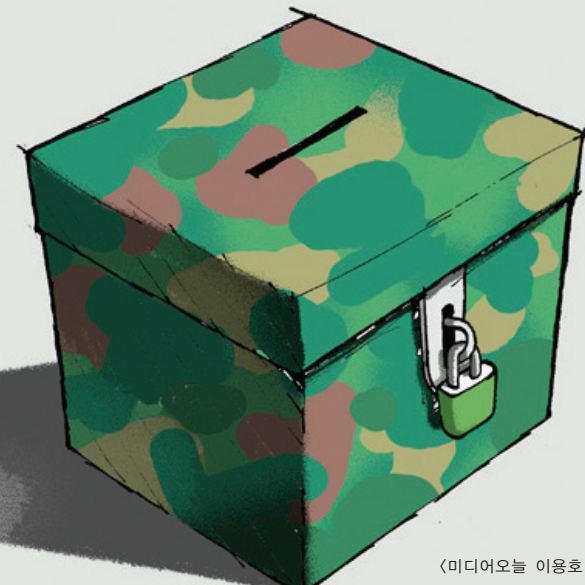
평화를 위협하는  
MD, PSI 참여 안해도 되고  
미군기지로 빼앗긴 농민땅도 찾을 수 있고  
미군범죄나 환경오염도 없어지지.  
또 미군에게 국민 혈세 안 퍼줘도 되고  
작전통제권도 되찾아 오니  
기 좀 펴고 살겠네.



## 대중의 힘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정치의제로!

-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 평화협정 체결운동은 전쟁과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정부여당의 입지를 허무는 투쟁으로 2012년 정권교체 투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문제처럼 한반도 평화실현 문제도 2012년 양대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 국민 대중의 힘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정치이슈로 만들고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정치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합니다.

‘전쟁’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미디어오늘 이용호 화백〉



##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국제적 운동으로!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도 평화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국제적 운동으로 벌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 ◆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 “평통사가 주축이 되어 벌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미 정부에게 평화협정 만들어라, 부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조미 공동 커뮤니케이션에서 합의하지 않았느냐, 회원들이 1년에 한통씩 편지만 써도 대단한 운동이 됩니다” (2009.11.29)
- ◆ 배우 권해효 : “통일을 하려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목표마련이 중요한데 평화협정 실현운동이야 말로 그 첫 출발이 되는 운동입니다”
- ◆ 프랑스 조보린선협회 : “대화와 정의로운 평화는 통일로 나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통사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프랑스 내에서 알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2011. 2.19)

## 평통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평화협정안은?

-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과 여러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들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안)을 준비했습니다.

### 기안자 (가나다 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노정선(연세대 교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통사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봉(원광대 교수) 이철기(동국대 교수)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조주형(평통사 지도위원, 공군F-15K시험평가단장 역임)

### 제안자 (가나다 순)

강남훈(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한신대 교수) 권정호(민변 변호사)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상곤(한신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승교(민변 변호사) 김준기(전 신구대 교수) 김진환(현대사연구소) 김한성(교수노조 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노중선(4월혁명회 대표)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용일(민변 변호사) 배성인(한신대 교수) 설창일(민변 변호사) 심재환(민변 변호사) 이광철(민변 변호사) 이재정(민변 변호사)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연희(민변) 장창준(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조영선(민변 변호사) 조도문(민교협 공동의장, 가톨릭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최병모(전 민변 회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철영(대구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황정화(민변 변호사) 고계조(아츠시(일본, 야마구치대 교수) 한호석(미국, 통일학연구소 소장)

-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이 평화협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발효 3년 내 주한미군 철수, 남북 상호군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2008. 3. 24, 평화협정실현운동 선포식에서)
- ◆ 셀리그 해리슨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평통사의 선구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평통사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이 협정안은 경탄스러운 의미를 갖습니다”(『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천사에서)



〈한겨레 전면광고 2010. 7. 27〉

